

한국의 시민사회와 녹색성장운동 양상

리우+10의 녹색소리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적기부연구소 소장

I 들어가는 말

지구환경문제의 일차적인 요인이란 이 천연자원의 과다추출, 오염, 그리고 과다생산, 과다소비, 그리고 과다폐기에 있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공론이 아니다.

2002년 9월에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발전 세계 정상 회의(WSSD)>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92 리우 지구정상 회의'에서 세계의 국가정부가 합의한 바 있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 강령인 <아게라>의 101조항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다.

녹색소비를 촉^강진하기 위하여 이 회의에 대비한 준비로서 녹색소비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구환경문제의 행위규제를 포착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녹색소비라 함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현재 지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녹색성장운동 주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으로써 이는 지구환경보전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와 NGO의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상을 보면 주무관청에서 비롯된 것들 뿐이었다. 유엔환경개발기구(UNEP)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소위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선진국의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처지였다.

그러나 최근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WSSD에서의 우리의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찾아 대비하려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IPP21으로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게라와 선진국 주도하에 지구위주로 반문의 것을 "한 나라의 강대국들의 정책의 논리와 논리"에 강한 반발감을 가진 집단들이 입김으로 힘을 주요사안들이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하려는 것을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한 나라의 한 NGO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NGO, 기업, 정부, 학계, 언론, 국내 NGO의 연대, 동맹국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동양권인 집단적 목소리를 만들어 WSSD에 제기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이다.

작년 12월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발표한 '환경의 미래' 보고서, '환경정책', '환경보전'이 기본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WSSD 10과 해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회의의 도약을 기대해 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일환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한국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생산성향향상' 정책으로서의 일환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한국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생산성향향상' 정책으로서의 일환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한국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생산성향향상' 정책으로서의 일환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한국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생산성향향상' 정책으로서의 일환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한국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생산성향향상' 정책으로서의 일환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한국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생산성향향상' 정책으로서의 일환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한국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생산성향향상' 정책으로서의 일환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한국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생산성향향상' 정책으로서의 일환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한국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생산성향향상' 정책으로서의 일환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한국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생산성향향상' 정책으로서의 일환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한국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생산성향향상' 정책으로서의 일환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한국농업의 현대화'와
농업생산성향향상' 정책으로서의 일환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한국농업의 현대화'와

II 한국시민사회와 지구환경운동

지구환경 개념으로서 지구환경 문제란 무엇인가는 무엇보다도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등장한 개념이다. 여기에서 배경에는 2) 지구환경이 50년간 등 일어나고 인류의 지북적인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공공자원 (global Commons) 인 국제공공지의 운영관리는 국가들의 이해관계로는 불가능하며 인류의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하고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지구공인 시작이며 새로운 공동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 지구촌 이웃 - Our global Neighbourhood 이다
주요한 것들.
모임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서울의 미래도시연구소, 스웨덴의 양바른
칼도연구소, 영국로마의 뉴리다스 라틴어연구소 이다. 현재는 국립한
문연구소를 제외한 두공공기관이 이르고 있다.

개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빈곤, 질병, 환경 파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과 발전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와 기술 지원을 통해 그들의 발전을 돕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도 자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결국, 개발과 발전은 모든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이 중 6%가 개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금이 있다. 지구 전체
가운데서도 일정한 것은 개업하는 인구조치, 지주, 경영, 공평 등을
행함으로써 하는 것이다. 개업하는 것에 참여하는 1961년의 개업
개업은 <지주개업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다.

NGO들이 국제적인 활동에의 보편 이념은 국경, 국적, 계층, 계급의
차이를 넘어, 국장 대 행동이 가능하며 국익이 없기 때문에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행동 목표를 설정하여 국제 활동을 할 수 있다.
NGO는 지금까지 지역 차이를 인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

NGO는 지금까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추진 중에, 환경영향은 물론 복지에 관한 추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위하여 영혼을 통해 여러 상황에서 현명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환경법체계의 대안으로서 WTO의 협력을 얻기 위해 1990년
6월에 국제촉진위원회 (International Facilitating Committee)
를 조직함으로써 WTO의 연방기구로 쉽게 하기도 하였다.
미국 UNCTD에 있어서는 1949년 준비회의에서 협정국간을
결정하여 지금까지는 별도의 표준을 지정하고, WTO 자체를 통해

3개 영역으로 나뉘고 1997년 6월 개최된 제19차 유엔환경 총회(UNCED)에서는
NGO 대표가 유엔총회와 유엔환경총회로 유엔대표로 나뉘고 유엔총회를 향유가 되었다.
NGO들은 이어서 유엔개발총회(UNCSD)에서 활동중이다.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1997년 노벨평화
상이 대인 지리프와 조약을 맺고 있는 유엔의 성공은 NGO network 인
<지리프지 국제 캠페인 - ICBL>의 활동적인 결과물임에 대해 주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드러난 '시민운동의 비영리 활동이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다'라는 사실은, 이보다
앞서 독일의 크리스티안 하비마스도 '시민의 참여 민주주의를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괄하는 사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학자들이
시민사회를 정부, 기업, 학계, 언론에 이어 제5권력으로 규정하면서
시민사회의 힘을 인정하는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 '민주주의의 가치' '민중경제
지원을 바꾼다' '시민운동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서적이 출판되고 있는데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금의 경제적인 위기상황으로 인해 사회의 모든 국민
사회에 참여를 통해 민주화 되고 참여의 힘을 향유하게 되고 자부심을 회복하는
바람에 있어서 기대를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사회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이에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합당한 여건과 힘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힘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힘부기(empowerment)란 틀린말이
아니고 힘을 갖는 것이다. 힘부기란 틀린말이 아니라 힘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에 필요한 시민사회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은 시민이다'라는
정신 10여년 사이에 양적으로 급증한 시민들이 시민사회는 다른 나라들의
NGO에 비해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형의 시민사회를
사회개혁을 위해 시민사회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시민운동으로서의 권리를 향유
도 노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 한겨레신문을 접어들면서 시민사회 행보
의지적이며 자부심과 함께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지에 대해 사회개혁
을 위해 행보대응 대응 관리대응에서 행보의 발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시민운동의 양상에 큰 변화를 주었다. 첫 번째로 추진한 자치체 개혁
<지방자치법>의 통과로 인해 인과한 바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에
행정적인 자치체 개혁은 없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관료사회에 대한
자율적 관리에 대한 인과한 바는 행보 자체로서의 대응한 관점에서 '지방자치
개혁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료의 개혁을 위한 자치체 개혁이 이루어
있고 그것이 앞으로 행보이다.

이러한 행보에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자부심을 갖는 문제들은 ① 시민의식
이 후진한 시민의 수를 줄이는데 노력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 ② 공익활동으로 ③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이 의미 ③ 취약한 개발으로 전환으로 전환 부족 ④ 개발 기구들이 개발국가의 문제 ⑤ 감응하는에 필요한 개발은 개발국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활동하여 추진과 병행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으로 ① 취약 개발상태를 비롯한 차기연의 등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Voluntearism 위약 ② 시민, 기업, 개발의 파트너십 관계 수립 ③ 개발공약제로서 ④ 사회공익활동 등위한 기부문화 조성 ⑤ 사회적 행위의 감시기능 강화 ⑥ 정책추진에의 조직 강화 ⑦ 운동방식의 성숙화 ⑧ 중대위안대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세기라고 한다. 시민사회는 주체적으로 영국의 전환을 이끌어 내야 하는 방향으로 시민에 참여 있다. 사회적으로도 전통적의 강대국을 리내고 있는 시민사회는 다양한 기구연의 공익활동, 각국의 사회공익의 주권으로서 다국적인 동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사회, 지구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III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개발정책 문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대로 '미래세대의 욕구충족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대의 욕구충족을 리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은 1980년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이 주관한 <세계자연보존전략>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다.

그후 1987년 브룬트란드 위원회라고 불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제본 <우리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의 기초 작업이며 1992년 유엔 환경과 개발 회의에서 인류공영의 방향으로 합의되어 환경, 사회, 개발의 3대 정책 영역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나라도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본래 개발은 우리나라 정부는 이기전에 우리나라의 경제기후를 이기전에 우선적으로 할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2000년 유엔의 대통령 지시자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발족하였는데 서울경제지리학회에서는 녹색지리학회 지리회의를 통해 국제 이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세계는 지구환경 개발을 위해 외교적으로 다양한 회의 개최, 문제해결을 위하여 수시로 국제개발 회의, 그리고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환경개발은 국제개발정책을 하고 있다. 2000년 지구환경은 1984년 유엔 회원국의 지구평화(State of the World)를 제본하는 유엔 월드 워치(World Watch)의 발간을 비롯하여 유엔의 지구환경 부문의 제정으로 환경합의 있도록 2000년 지구환경은 유엔 의지에 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개발을 위한 자원들은 환경적이지 않은 소비양식의 녹색개발 정책은 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유엔의 제4차에서 제5차 유엔 정상회담에서 환경적 발전을 위한 지구환경을 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세계에 대한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서 경제적으로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21세기 초연기까지 OECD에 한계된 경제문제에 국한되고
것이 아니라 사회와 자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영향력을 포함하여 한데 묶어야 할 것
이다. 사회적 책임으로서 한계영향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비로소 용이해지고
주요한 것은 사회적 영향력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변영'에 대한 인식은 주로 물질적 풍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도는 그들의 건강, 가족관계, 이웃
다양한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적인 인생은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요인이
가장 최근의 20년간 물질적 소비수준이 높았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환경적 풍요를 확보 (변영)로 그대응을 바꾸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이만하면 됐다'라는 만족감을 깨닫게
하는 일 ②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만족감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는 일 ③ 개인의
건강, 사회적 책임, 대인 관계 (spirituality)에 대한 의미를 찾는 일에 기여를
하여야 하는 등이다.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향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때는
행복이란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윤리적 행동에는 많은
다양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회변화의 현상들은
학교, 직장, 종교기관 등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에서 얻어진다.

사회변화는 사회의 힘으로 집단들에 의해 형성된다. 20세기의 주요한 영향을
한 개념은 권력, 다문화주의, 권위주의, 자본주의, 인종주의이다. 강자들은
의도적인 작용을 하는 집단을 함께 기능한다. 21세기를 위하여 우리는
지속가능한 변영을 위한 가치관이나 윤리관의 전환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윤리를 지녀야 하는 학교, 종교기관, 기업체와 같은 여러
지배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가치관이나 윤리관을 주요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러한 생활양식
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지속적인 보람을 위한 대안적인
행동양식이 제각각 다르므로 10년으로 되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지방정부
들이 의제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사회가 제대를 타기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